

네팔 형사사법 제도의 소개 및
네팔과 한국 법체제 비교

Rama Devi Parajuli

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, Nepal

목 차

- 네팔 법률 제도 소개
- 형사사법 제도
- 형사사법 제도의 구성 요소
- 네팔과 한국 법체제의 비교
- 결론

네팔 법률 제도 소개

- 네팔 법률제도는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짐
(키라트 시대부터 시작)
- 네팔 법제도는 두 시대로 나뉨:
 - 법전 편찬 이전 (1853년 이전)
지도자의 뜻과 명령, 종교, 관습에 따름
 - 1853년 이후 법률 체계화 시대
- 1853년 최초의 법전 편찬
- 힌두교의 철학, 관습과 전통에 의해 영향

네팔 법률 제도(계속)

- Rana 통치 시대에 최초 헌법 형태로 정부법 수립(1947년)
- 잦은 정치적 변화로 수 차례의 새 헌법 공포
- 현재 6차 헌법
- 최근 선출된 제2차 제헌 의회는 7차 헌법개정 진행
- 네팔 법률 제도는 라나 정권(Rana Regime) 붕괴 이후 1950년 공포된 임시 헌법을 토대로 민주화 · 근대화 과정을 거침
- 대법원법, 공민권법, 국가공무원법, 국가법(1963) 같은 많은 법률 제정

네팔 법률 제도(계속)

- 임시 헌법(2007)
 - 국가 기본법
 - 주권의 확립
 -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나 실질적인 국정 총괄은 수상
 -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
 - 인권 보호
 - 기본적인 권리-23가지(정의 실현에 대한 권리)

형사사법 제도

형사사법 제도의 목적

- 법과 질서 유지
- 국가의 평화와 번영
- 범죄자 처벌
-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
- 잠재적인 범죄로부터의 예방
- 범죄자 교화

형사사법 제도의 구성 요소

- 형법과 형사정책
- 경찰
- 검찰
- 법원
- 범죄
- 범죄 피해자
- 피고자
- 시민 단체
- 구금, 구치소, 교도소 / 교도관

형법과 형사정책

- 실체법 - 국법 1963년, 인신매매 및 운송(제어)법(2007년), 마약관리법(1976년)
- 절차법 - 국법, 즉결재판법, 특별법원법, 지역 규정, 항소 및 대법원 규정
- 형사정책 - 국법, 특별법, 교도소법(1905년)
- 형법과 형사정책의 개혁과정에 있음 → 형법, 형사소송법, 처벌의 평가 및 실행 법안은 국회 의결 중

범죄 조사

- 네팔 경찰 (내무부 산하)
- 네팔 경찰청 - 범죄 수사과
(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; CID)
- 5개 지역 경찰서 - 연락 사무소;
- 75개 지방 경찰서 : 해당 지역의 범죄 수사 관할권 /
각 지방 경찰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분과 사무소
있음
- 여성 · 아동부 센터는 각 75 관할 지역에 위치 여성
· 아동 관련 240개의 팀 구성

형사사건 기소에 대한 제도적 장치

- 대검찰청 - 1
- 항소 검찰청 - 16
- 지방 검찰청 - 75
- 특별 검찰청 - 1
- 일반 검사 - 375명
 - 공익과 법원 직원의 보호
 - 정부를 대신하여 기소와 불기소 결정의 권한
 - 수사 경찰관에게 수사 지휘
 -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의 올바른 이행을 요청

형사사건의 판결

- 대법원 - 1
- 항소법원 - 16
- 지방법원 - 75
- 전체 판사 수 - 210명
- 특별 법원, 행정 법원, 노동 법원
- 외국인 고용 재판소
- 준사법기관 → 지역행정사무소(75), 지역산림사무소, 출입국사무소

범죄 피해자

-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
-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심리적 피해로 고통 받음
- 가해자를 처벌하여 피해자에게 구호 제공
- 피해자 보상 및 배상금을 제공
- 범죄 제보자, 목격자가 주요 증거
- 피해자의 권리 접근 방식은 최근에 입법된 법률에 적용

피고자

- 헌법에 의거하여 피고자에 정의 실현 권리 제공
- 체포 이유를 알 권리
- 구금의 정보를 얻을 권리
- 법원의 특별한 명령 없이 24시간 이상 구금하지 않음
-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
- 진술 거부권
- 무죄추정의 원칙
- 관할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
- 국선 변호인 제공

시민단체와 일반국민

-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화와 번영의 주체이며 사회 화합의 행위자
-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 경찰, 검찰 및 법원에 협력할 의무
- 안정되고 품위 있는 삶

네팔과 한국 법제도 비교

- 영미법 / 대륙법
- 당사자주의 / 직권주의
- 수사 - 경찰 / 사법경찰과 검찰이 수사,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 개시하는 경우도 있음 (예) 부정부패
- 기소 - 검찰 / 검찰이 막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불기소
- 용의자 체포 - 체포 전 법원 명령 불필요 /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전 법원 명령(영장) 필요
- 구속적부심사제도 - 없음 / 있음
- 기소 권한 -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검사에게 위임 / 검사가 직접 기소제기 여부 결정

네팔과 한국 법제도 비교

- 검찰 관련 법 → 공직자법, 검찰 규정 / 검찰법, 검사징계법 및 기타
- 법원 시스템 - 3심 제도 + 특별 법원 / 3심 제도 + 헌법 재판소 + 특별 법원
- 지방법원 심리 제도 - 단독 판사 / 단독 및 합의부
- 재판과 처벌 - 최고형 종신형 / 사형제도, 종신형, 가석방, 집행유예
- 형사 조정 제도 - 없음 / 있음
- 배심원 제도 - 없음 / 있음

결론

- 사실기반조사, 증거 기반 기소 및 판결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에 필요
-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못함
- 급변하는 시대 속에 법은 시간과 사회변화에 발 맞추어 변화해야 함
- 네 팔 형사사법 시스템의 도약 기대 / 예상
- 양국의 법 제도 비교연구는 시스템 개혁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를 찾는 데 도움

감사합니다.